

# 부패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문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은 주로 지대추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부패의 속성 자체가 복합적인 현상이며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와 거시 차원에서 통합하여 이에 관한 분석틀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횡단분석으로 부패형성의 공통분모를 추출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회귀분석결과, 부패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및 주관적 차원이 함께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 시민사회, 개인주의 효과에 주목할 수 있다. 맥락분석에서는 지배층의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며, 반부패 노력에 관한 한 정부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패청산에 대한 진단은 경제성장의 효과와 함께 자유시장의 원리에 위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자유주의 시각이나 시장실패를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보수주의 시각을 넘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시급함을 말해 주며, 이에 관한 질적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주제어** 부패시스템, 지대추구, 시민사회, 반부패노력, 아시아

## I. 문제제기

부패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인류의 발전과정과 함께해 온 매우 오래된 현상으로 주어진 사회의 구조와 연계되어 사회발전과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사회구성원이 선출한 대통령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는 비리유형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국한된 단계에서 벗어나 국제지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정부패를 숨기거나 방조하면서 연고주의(nepotism)와 정경유착 등

\*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故 Robert Marsh 선생님과 故 정재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심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과 자료 수집과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경민 조교에게도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의 파행으로 이어져 더 악화된 형태의 부패 행태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살피고 정도를 가도록 보좌해야 할 참모진과 정치인들의 왜곡된 언행으로 사회구성원의 정부조직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부패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부패현상의 지속성과 급격한 분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반(反)부패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패현상은 최근의 사례들만 살펴봐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에 관한 연구 주제는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현안이기도 하다. 예컨대 아시아 각국의 정부 고위층에서 발생한 부패사안은 정경유착과 국가포획(state capture)의 전형을 보여주며 입법, 사법, 행정부의 신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반부패 노력도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홍콩은 1948년, 싱가포르는 1960년, 말레이시아가 1961년, 태국은 1975년에 이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부패와 반부패의 상호작용은 정치적 대중영합주의(populism)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패 및 특권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에 몰입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들은 잘못된 부패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냉소만 받을 뿐이다. 사회정의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오히려 부정부패를 자행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며, 급기야 정직과 신뢰를 보여줘야 할 당사자가 사안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면 구성원들은 실망을 넘어 사회적 분노가 누적되어 갈 수밖에 없다. 부패문제는 사회 전체의 병적인 요소로서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부패에 관한 이론적 쟁점은 지대추구(rent-seeking)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부패의 속성 자체가 워낙 고질적인 사회현상이며 분석틀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부패의 비밀스러운 속성과 이를 둘러싼 구조적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특정 사회의

부패 수준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 부패 측정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Andersson and Heywood, 2009; 윤은기·이정주, 2014). 더욱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별도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연구 및 사례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함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국가 간 회귀분석을 통해 부패인지에 관한 공통분모를 추출하되, 사례분석의 수준을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군의 비교, (2)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비교, (3) 한국사례의 특수성 고찰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오늘날 발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지만 여전히 부패문제가 심각한 아시아의 경험은 선진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진단함으로써 이 지역의 전반적인 부패수준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고 권력층의 부패로 촉발된 최근의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사회발전의 전망 속에서 부패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 분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부패인지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에 대한 성층수준을 높이고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부패현상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한다. 국가공무원이 사회적 자원을 사적 영역에서 분배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뇌물예 대한 동기부여는 항시 있기 마련이다. 부패의 가능성은 관료조직체의 통제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주 및 크기와 연관이 있으며, 이에 개인이나 기업체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꺼이 뇌물공여의 함정에 놓이게 된다. 국가공무원이 공적 자산을 유용하는 사례는 부정청탁이나 불법 선거운동 등의 부패한 거래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기능을 왜곡시키게 된다(장은주, 2016).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감지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혜택은 감소하며 뇌물공여의 비중도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패수

요와 함께 뇌물공급의 지속가능성은 위협에 대한 상대적 인내력을 어느 정도 감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뇌물 대상자에 대한 대안을 찾거나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물리적인 위협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불법적인 뇌물공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전수일, 1996). 이러한 기제방식을 수용한다면 특정 영역에서 상당히 부패한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해지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전자에 의해 후자가 매몰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패 상황은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에 대한 커다란 도전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및 정치적 정당성을 붕괴시키기도 한다(Anderson and Yuliya, 2003).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의 목표달성에 실패했을 때 부패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간주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World Bank, 2017). 사회발전의 지형에서 부패문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사회 불평등과 갈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Acemoglu and Robinson, 2013). 경제성장이론에서는 높은 소득을 갖는 개인에게 부패는 높은 기회비용과 낮은 효용성으로 그다지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Treisman, 2007). 경제성장을 통해 교육수준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경계선이 명확해져 부패에 대한 감시효과도 증가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부패가 나타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에 초점을 두며 신뢰수준과 시민참여 등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Montinola and Jackman, 2002; 신동준, 2013). 특히 부패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근간을 둘러싼 맥락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Pawar and Cox, 2013).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 국한된 분석전략은 부패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인지와 태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주관적 차원에 기초한 문화이론은 도덕적 관념이 결여된 가족주의나 연고주의 등 특정한 관습을 갖는 사회에서 부패현상이 만연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뢰문화는 부패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에 따른 관행과 행위양식을 반영한다(Melgar et al., 2010; 고길진·이보라, 2012). 행위

자를 강조하는 이 시각은 거시적 접근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부패에 관한 믿그림을 제시한다.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지나 태도에서와 같이 사회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핵심기제인 규범 및 관행과 연계되어 부패현상이 지속되며, 역으로 반부패 노력은 정당성 위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Bohn, 2012).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권력의 균형점은 점차 이동하여 개방된 민주주의 체제로 가게 된다. 반면에 전통적인 체제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주로 위계질서적인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패의 전염성이 훨씬 높아진다. 미시적 접근은 부패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소를 등한시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다.

확실히 양쪽 시각은 부패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을 각기 강조하고 있으며, 상반된 지향점을 갖는다(Hakhverdian and Mayne,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패에 관한 사회 구조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경향에서 양 시각의 적합성을 도출하고 분석적 차원에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구조적 변수로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경제수준이 높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국가에서 부패수준이 낮다는 분석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Batabyal and Chowdhury, 2015; Mocan, 2009; 장근호, 2000). 선진국에서는 부패를 진단하고 방지하는 데 사회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제도수준의 증가는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처벌하는 사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Elbahnasawy and Revier, 2012).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민주화 정도 및 제도수준이 개선되고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가 향상되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부패를 통제할 능력도 높아진다(Mo, 2001; 이상환, 2008).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개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세금 및 할당제도와 같이 각종 인허가 제도가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지고 지대추구의 행위를 할 기회가 많아진다(Bai et al., 2013; Kenny, 2009).

두 번째 핵심변수인 불평등은 부패구조에 영향을 주며 반부패 노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수준을 낮춘다(Kerbo, 2009).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 공공 영역에 대한 부유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사회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세나 자금세탁 등을 증가시킨다. 곧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Peyton and Belasen, 2012). 빈

곤충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불만과 갈등이 분출하고 부패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Alesina and Angeletos, 2005). 이러한 조건에서는 위험부담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패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부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다중기법(multi-method)의 질적 연구에서 공무원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빈곤층으로부터 더 많은 뇌물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ried et al., 2010). 반대로 불평등의 완화는 구성원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며, 중산층의 증가는 특정한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부패수준이 내려간다(Samadi and Farahmandpour, 2013).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서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의 유인관계를 고려할 때, 부패시스템의 두 번째 축은 필연적으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김혁, 2015). 정부의 역할은 부패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행정기관과 조직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약한 정부는 부패를 초래하게 된다(Shleifer and Vishny, 1993). 공무원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부정부패의 은밀한 관행은 세금추징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정부의 역할을 왜곡시킨다. 정부기관이 반부패 노력은커녕 부패의 고리 안에 놓여 있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됨으로써 심각한 부패의 악순환이 영속화될 가능성은 높아진다(Krueger, 1990; 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수준과 통제비용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Kaufmann and Kraay, 2004). 시민사회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패에 관한 감시와 여론형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패사례뿐만 아니라 부패통제의 책임이 있는 정부 및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 왔다. 사회구성원이 정부를 선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장 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에 시민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Themudo, 2013). 시민의식에 기초한 민주적 토대와 사회책임감이 부패를 감소시키는 데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Forbis, 2013).

미시적 차원에서 볼 때, 사회구성원의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사회 환경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적 행위의 결과를 초래한다(Mauro, 1998).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환경적 여

건에 따라 분화하며, 부패인지도 삶의 조건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패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인내력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행복수준으로 이어진다(Bok, 2011; 서문기, 2015). 실제로 부패에 대한 인내력이 높을수록 부패수준은 올라가며 경제적 자유의 감소와 함께 행복수준이 낮아지고, 부패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사회의 구성원일수록 자신들을 더 행복하다고 여긴다(Arvin and Lew, 2016).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다면 왜곡된 통로를 통해 보상을 찾거나 할 것이며 이 지점에서 부패가 형성되어 반부패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Li, Gong, and Xiao, 2016).

부패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차이를 진단하고 부패를 개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도신뢰를 강조하고 있다(Rothstein and Teorell, 2005; Uslander, 2008). 제도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이 부재할 때 사회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패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 등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비합리적으로 감소하거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제도적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면서 비정상적인 편법이 만연하게 된다(Mishler and Rose, 2008). 따라서 부패문제는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징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만약 제도 신뢰가 낮다면 지대추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원분배 기제가 왜곡되어 결과적으로는 부패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구성원이 사회경제적 환경에 만족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부패를 수용할 가능성은 줄어든다(송창근·박홍식, 1994).

마지막으로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부패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가 있다(Harrison and Huntington, 2000; 박선용, 1998). 문화적 가치체계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자원분배에서 공공분야보다는 사적 분야에 더 많이 할당하는 경향은 필연적으로 부패편차를 가져온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기회구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부패사슬에 좀 더 접촉할 기회와 참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Olken and Pande, 2012). 사회적 차원보다 선행하는 개인주의 가치가 부패에 대한 인내수준과 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근원적으로 부패의 토대를 배양한다는 사

실은 기존 연구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Hofstede, 2003; Van Dijk and De Cremer, 2006).

부패문제는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반영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부패문제를 단순히 객관적 조건으로서 접근하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의 속성과 실체는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반부패 노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부패의 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관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둘째, 부패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조작적 정의의 편이성으로 주로 경제수준에 대하여 평면적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차원인 문화적 범주를 적극 수용하여 부패인지에 대한 영향력을 천착함으로써 입체적인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모델이 부패문제에 관한 정부의 역할에 집중하여 일면만을 강조하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수준에 관해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되 시민사회의 역할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통합모델을 개발한다.

### III. 분석 자료와 방법

왜 부패가 특정한 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많은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상반되고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인 부패사례를 세밀하게 고찰하는 연구가 많은 데 비해 국가 간 비교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다. 부패에 관한 연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부패현상의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인 인지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패의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와 측정변수의 교차검증을 위해 세계부패지수(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를 활용하여 진단한다. 이 자료는 사회구성원이 인지하는 부



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흔히 부패현실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잣대(proxy alternative)로 사용된다(Seligson, 2006). 여타 지표와 달리 국가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획득하는 데 용이하며 자료의 일관성과 적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인지지수는 각국의 부패수준에 대해 전문가 집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기 조사하여 측정, 평가한 것으로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반부패 노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TI, 2017). 본 연구에서 인지의 개념은 앎의 수동적 과정을 지칭하는 인식의 좁은 의미와는 달리 정보처리의 능동적 과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까지 포괄한다.

경제성장의 측정치는 국제비교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capita)을 활용하며, 소득분배의 기준으로는 전통적인 불평등지수(Gini Index)를 채택한다. 경제적 차원 이외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함수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책임에 관한 거버넌스 지수와 시민사회의 책임 및 참여수준에 관한 측정치를 사용한다(World Bank, 2017).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는 정부책임, 사회참여, 정치안정, 규제질, 법규칙, 부패통제의 6개 영역에 걸쳐 세계 200여 개국의 광범위한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는 복합지수(composite indicator)이며 각 세부지수별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민사회지수는 사회구성원이 정부를 선택하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표현과 언론 및 집회결사의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지수이다.

부패의 미시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평가요소를 포함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전 세계 80%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세계가치조사의 자료(World Values Survey, 2017)를 사용한다. 문화적 가치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변수를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하여 분석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범주를 포함하고 비교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조사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 국가별 전담 조사팀에 의해 현지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엄격히 확인하며, 조사범위로는 국가별 시계열 자료까지 포함한다. 이 자료는 조사대상국인 57개국

표 1 측정지표 및 세부내용

변수	측정지표	세부내용	출처
부패인지	부패인지 지수(CPI)	분야별 부패인식정도에 기초하여 부패수준을 0-10(청렴)에서 측정하여 국가별 비교자료로 활용	TI (2017)
경제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내총생산의 자연 로그값을 측정하여 경제성과를 반영	World Bank (2017)
소득분배	지니(Gini) 지수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누적백분율에 의한 로렌츠 곡선과 균등선에 의한 면적으로 계산되며 0~1(불평등) 사이에서 분포	World Bank (2017)
정부책임	거버넌스 지수	정부책임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공서비스의 질, 정책독립성과 책임성 등 거버넌스 능력을 평가	World Bank (2017)
시민사회	참여수준	시민의 사회정치적 권리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로 언론의 자유, 인권보장 등 시민사회의 책임 및 참여수준을 반영	World Bank (2017)
행복수준	만족수준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5분위 척도 측정)	WVS (2017)
제도신뢰	신뢰수준	‘전체적으로 당신은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10분위 척도 측정)	WVS (2017)
개인주의	자아중심	‘전반적으로 당신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5분위 척도 측정)	WVS (2017)

의 8만 5,000명에 대한 의식조사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가족, 종교, 직업 등 생활세계로부터 정치, 환경, 국가 등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가치와 태도에 관해 표준형으로 구조화된 250개 문항을 중심으로 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가치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또는 “전반적으로 당신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국가별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치로 측정한다.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 설계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부의 역할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함께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나 행복수준 및 가치체계 등을 핵심적

인 변수로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와 같은 외형적 측면에 초점을 둬으로써 부패를 둘러싼 비(非)경제적 조건에 관해 사회구성원이 직접 느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분석틀에서 8개의 핵심변수에 관해 부패인지지수 조사대상국 176개 국가와 세계가치조사 대상국 57개 국가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료획득이 최대한으로 가능한 51개 국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별 측정지표와 세부 내용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 IV. 분석결과

부패에 관한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포함하는 기술통계량은 표 2를 참조할 수 있다. 국제지형에서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횡단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조사 대상국의 항목별 평균치를 보면 경제성장, 소득분배,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부패수준 및 정부 책임은 중간 정도인 데 비해, 시민사회와 제도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문제의 거시적 차원을 반영하여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와 정부 및 시민사회의 함수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모델과 미시적 차원을 포함하는 확장모델의 분석결과는 표 3에 나타났다. 회귀결정계수( $R^2_{adj}$ )값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모델은 종속변수인 부패인지의 변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준다. 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결정계수(multiple  $R^2$ )방법을 활용하여 분산의 변동요소를 통제한 결과, 각 독립변수의 변동값(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편차는 1~2점대에 분포하여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모델 1>은 종속변수의 변동량 가운데 75%를 설명하고 있으며,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함께 반영하는 <모델 2>는 77%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분석결과는 부패와 관련하여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후자에서는 개인주의 가치체계가 추가되어 <모델 1>의 분석결과를 확장시키고 있다.

표 2 기술통계량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부패인지	51	14	90	46.59	20.57
경제성장	50	6.45	11.44	9.172	1.240
소득분배	46	.250	.670	.388	.099
정부책임	51	2.8	6.3	4.512	1.004
시민사회	50	-1.98	1.71	-.087	1.001
행복수준	51	52	196	168.37	22.87
제도신뢰	51	3.2	66.1	23.24	16.10
개인주의	51	40.8	87.0	69.00	11.66

표 3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부패인지			
	〈모델 1〉		〈모델 2〉	
	B	VIF	B	VIF
상수	-17.141(18.036)		-12.895(19.950)	
경제성장	5.971*** (1.771)	2.088	4.483** (1.814)	2.390
소득분배	-2.990(17.830)	1.305	-8.601(17.786)	1.418
정부책임	2.743(1.811)	1.411	1.779(1.950)	1.787
시민사회	10.405*** (2.165)	2.079	11.101*** (2.135)	2.209
행복수준	-		.045(.075)	1.460
제도신뢰	-		.265(.106)	1.391
개인주의	-		-.069*(.147)	1.289
R <sup>2</sup> <sub>adj</sub>	.749***		.770***	
F	34.640		22.573	
N	46		46	

주: 괄호 안은 각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P<0.1, \*\*P<0.05, \*\*\*P<0.01

<모델 1>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경제성장 및 시민사회의 변수는 공통적으로 정의 계수효과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이 증가하고 시민사회의 권리영역이 확장되고 참여가 많을수록 부패인지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이론적 기대를 지지하고 있다(Mocan, 2009). 반면에 소득분배와 정부책임의 계수효과는 가설방향과 일치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불평등 요인

이 부패와 갖는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점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부패의 기회구조는 생성되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패의 투자효과에 잘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높은 위험 자체가 게임의 규칙은 아니며, 계층별로 서로 다른 종류와 규모의 부패에 연결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소득 수준의 상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균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은 경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하더라도 부패행위를 할 가능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낮지만 가난한 사회의 부자는 부패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거버넌스의 질을 포함한 정부책임의 계수효과에 대해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규모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의 형태에 따라 부패기회의 구조가 서로 다르게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확장모델인 <모델 2>의 변수별 회귀계수효과와 관련하여 객관적 차원에서는 <모델 1>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며, 여타 변수를 통제했을 때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에서 통계적으로 각기 .05 및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행복수준과 제도신뢰의 계수효과는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가설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가지 변수 모두 고도의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주어진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독립변수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특징적인 발견으로 개인주의 가치관이 높은 사회에서 부패인지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국가나 사회에 우선하여 개인적인 가치가 강조될 때 사람들은 희소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공공선보다는 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부패시스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효과는 여타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개인보다 국가와 사회를 강조하는 공동체적 규범이 오히려 특권층의 부패를 정당화하며 부패를 조장할 여지도 있다(Lederman, Loayza, and Soares, 2005).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부와 권력의 원천이 창출되며, 이를 둘러싼 집단 간의 경

쟁과 갈등으로 부패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성장이 1% 상승할 때마다 부패인지의 수준은 11.7% 증가하며, 시민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1% 강화될 때 부패인지도는 1.9% 상승하는 계수효과의 탄력성(elasticity)을 보여준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1% 증가할 때 부패인지의 수준은 10.2%씩 감소하는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는 달리 소득불평등 및 정부의 역할이나 행복 또는 제도신뢰의 수준은 정의 계수효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인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및 구조적 차원 또는 주관적 및 심리적 차원 가운데 어느 한쪽의 효과만으로 충분하다는 관점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두 차원이 상호배제적인 것은 아니다(Husted, 1999).

이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고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사례연구에 기초한 맥락분석을 통해 비교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구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국제지형에서 사회발전의 보편성과 주어진 사회가 가진 특수성의 함수관계에서 나오는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 집단에서 부패인지도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덴마크, 2위는 뉴질랜드이며, 그 뒤를 이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의 복지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홍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50위권을 유지함으로써 OECD와의 격차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표 5는 사회 각 영역의 부패 정도를 1~4점 척도로 직업별 부패의 심화 정도를 측정하여 아시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패가 심할수록 점수가 높으며, 가장 부패한 정도는 별표(\*)로 표기하되 각 부문별 상위 점수대는 굵은 글씨체로 구분한다. 분석결과, 호주, 홍콩, 대만, 일본 순으로 부패가 적으며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에 이어 한국의 부패정도가 높다.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집단의 부패 정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 것

표 4 부패인지 선진국의 비교

순위	국가	2016	2015	2014	2013	2012
1	덴마크	90	91	92	91	90
2	뉴질랜드	90	88	91	91	90
3	핀란드	89	90	89	89	90
4	스웨덴	88	89	87	89	88
5	스위스	86	86	86	85	86
6	노르웨이	85	87	86	86	85
7	싱가포르	84	85	84	86	87
8	네덜란드	83	87	83	83	84
9	캐나다	82	83	81	81	84
10	독일	81	81	79	78	79
11	룩셈부르크	81	81	82	80	80
12	영국	81	81	78	76	74
13	호주	79	79	80	81	85
14	아이슬란드	78	79	79	78	82
15	벨기에	77	77	76	75	85
16	홍콩	77	75	74	75	77
17	오스트리아	75	76	75	69	69
18	미국	74	76	74	73	73
19	아일랜드	73	75	74	72	69
20	일본	72	75	76	74	74
52	한국	53	56	55	55	56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2017), <부패인지지수> 재구성.

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의원, 관료 등 권력집단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핵심 직업군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찰 등이 그나마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패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경영인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성장의 규모와 속도만큼 부패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같은 맥락에서 법조인과 종교인 집단의 경우에서와 같이 잘못된 관행과 부패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구조화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사회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권력집단의 부패에 대한 평가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의 균열적인 단면을 드러내 주는 구조적 특성은 계층 격차와 연결되어 있으며, 만약 지배층이 사회적 책임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고 부패의 이점을 활용

표 5 아시아 국가의 직업별 부패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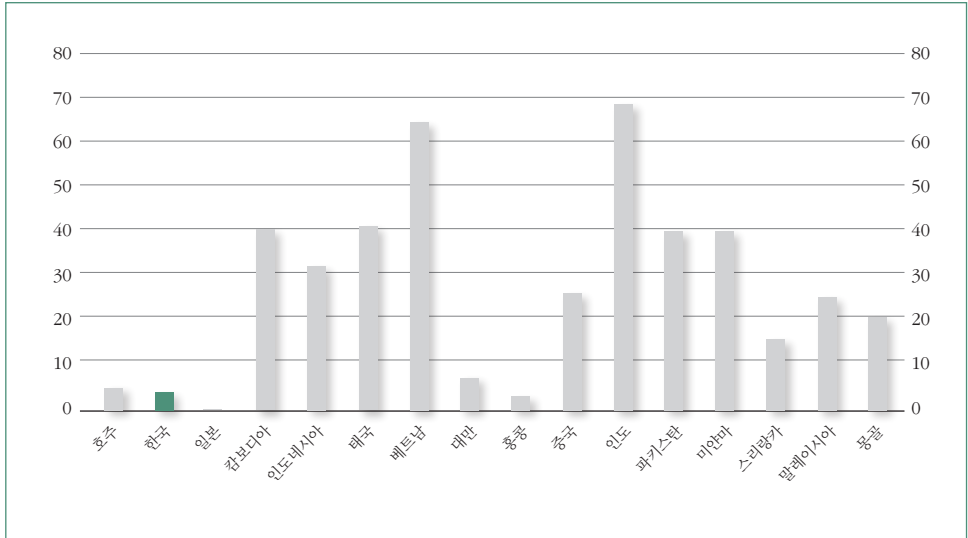
국가	대통령	의원	관료	세무서	경찰	법조인	경영인	종교인
호주	1.9	2.0	2.0	1.7	1.9	1.6	2.2	2.0
홍콩	2.0	2.0	1.9	1.6	2.0	1.4	2.1	1.6
대만	2.3	<b>2.6</b>	2.1	2.0	2.1	<b>2.2</b>	2.2	2.2
일본	2.2	2.3	2.2	1.7	1.9	1.4	2.2	<b>2.4*</b>
인도네시아	2.2	<b>2.6</b>	<b>2.5</b>	<b>2.5</b>	<b>2.4</b>	<b>2.3</b>	2.1	1.6
베트남	2.2	2.1	2.3	<b>2.5</b>	<b>2.7</b>	<b>2.2</b>	2.3	1.8
인도	2.1	2.3	<b>2.6</b>	<b>2.5</b>	<b>2.8</b>	<b>2.2</b>	<b>2.5</b>	<b>2.4*</b>
말레이시아	<b>2.5</b>	2.4	<b>2.5</b>	<b>2.6*</b>	<b>2.8</b>	<b>2.3</b>	<b>2.5</b>	2.1
태국	<b>2.7*</b>	<b>2.9</b>	<b>2.6</b>	<b>2.4</b>	<b>2.9*</b>	<b>2.1</b>	<b>2.6</b>	1.8
한국	<b>2.5</b>	<b>3.1*</b>	<b>2.9*</b>	<b>2.5</b>	<b>2.5</b>	<b>2.5*</b>	<b>2.7*</b>	<b>2.4*</b>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2017), <세계부패지수> 재구성.

한다면 권력형 부패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상류층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권위체계와 신뢰구조는 붕괴되고 사회의 균형점을 잃어버린 채 갈등은 넘쳐나 국가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뇌물경험 사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일본(0%), 홍콩(1%), 호주(3%)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영국과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69%), 베트남(65%), 태국(41%) 등이 뇌물을 준 경험이 많은 국가들이다. 한국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 등과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3% 정도만이 실제로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사대상자가 사실을 축소해서 응답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계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평가결과와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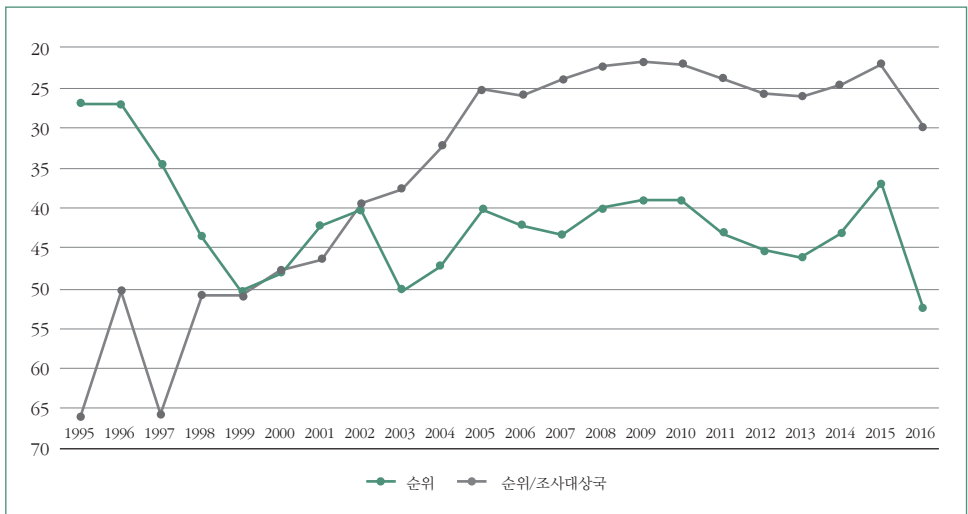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부패인지지수와 순위변화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지난 20년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오다가 최근에 권력층의 부패사건과 연계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하락하여 최저점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2003~2008)에서 부패인지지수가 5.0에서 5.6으로 상승하고 이명박 정부(2008~2013) 및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 5.4~5.5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초기 단계(1995~1999)에서 조사대상국 대비 한국의 낮은 순위는 선진국 표본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순위의 상대적 변화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국민권익위원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2017), <세계부패지수>.

그림 1 아시아 국가별 뇌물경험의 비교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2017), <부패인지 지수>.

그림 2 한국의 부패인지 지수 순위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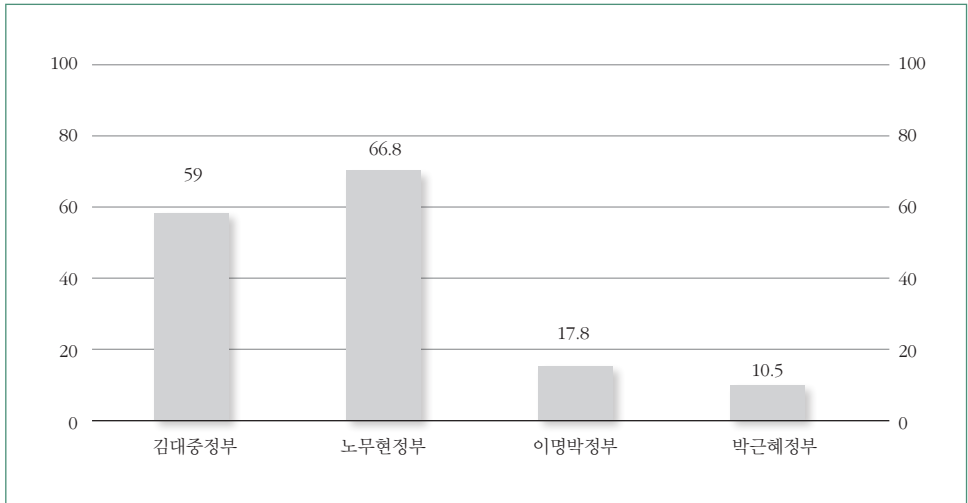
회, 2015), 공공기관 청렴도와 공직 부패비율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각기 8.89점과 5.8%인 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7.86점과 6.9%로 퇴행하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7.78점과 9.8%로 더욱 퇴행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표 6에서 보여주듯이 지난 1년간 부패가 심화되어 왔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입장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4%만이 동의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반부패 노력을 더 높게 평가(66%)함으로써 정부역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곧 ‘청탁금지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허일태, 2015). 부패신고의 수용가능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70%로 반대 입장과의 격차는 3.5배 이상으로 나타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패신고의 의무감에 관해서도 비슷한 비율로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부패신고 사안과 관련하여 법정 참여하겠

표 6 한국의 부패현실 인지도

(%)	아주 동의	다소 동의	중립	다소 비동의	아주 비동의	동의	비동의
부패수준 증가	20	30	29	15	3	50	18
부패사안 연관	18	29	30	15	8	47	23
반부패 정부노력	1	13	10	53	22	14	75
반부패 사회노력	10	56	6	21	4	66	25
부패신고 수용가능성	9	61	6	17	2	70	19
부패신고 의무감	17	54	9	16	2	71	18
부패신고 법정참여	12	43	6	31	5	55	36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2017), <세계부패지수> 재구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5), <부패인식도조사 종합결과>.

그림 3 한국의 정부별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

다는 비율은 55%로 그렇지 않은 쪽(36%)보다 다소 높았다.

사회구성원 10명 중 6명이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부패기관으로는 국회(89.8%), 정부부처(79.9%), 검찰 및 법원 등 사법부(75%), 지방자치단체(66.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7). 대기업과 시민단체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6%와 55.8%로 민간영역이 공공부문보다 부패정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공무원들은 자기 집단에 대한 부패경험비율이 3.5%라고 응답함으로써 일반적인 인식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 젊은 층, 고학력층, 중하위 소득층에서 한국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6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김대중 정부(1998~2003)가 59점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낮은 점수인 10.5점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가 17.8점에 그치고 있다. 부패문제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 정권에 대한 평가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확실히 사회발전의 수준과 부패문제는 단순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 정부의

역할을 포함해서 사회발전이 부정부패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많은 부패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효과는 부패에 대한 강력한 항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숙한 사회의식과 함께 시민사회가 부패감시와 반부패 노력 등 좀 더 활발하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부패의 생산방식인 지대추구 행위를 줄여 나갈 수 있다. 부패의 출발점이 공공 자산을 사적 이해관계로 유용하는 데 있다면, 국가공무원의 통제 안에 있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Schatz, 2013).

## V. 결론 및 함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튼튼한 방어막이 작동하며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의를 제시해 왔다(Caiden, 2001; Fijnaut and Huberts, 2002; Ghaniy and Hastiadi, 2017). 그러나 최근의 아시아 각국 사례는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업무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이 무너지고 독단적인 업무수행과정을 맹목적인 지지 세력에 맡김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부패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만한 충분한 의지가 있다면 부패의 토대를 와해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부패를 근절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 개별적인 부정행위나 사례에 초점을 두는 것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부정부패가 사회 각 영역과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제 및 정치적 힘과 연계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Suh, 1998). 부정부패가 일단 구조화되면 사회 전체가 감염되고 나쁜 관행과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파장이 항상성을 갖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중국에는 대다수 선의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권력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부

정책 및 기업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 힘은 오직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연계될 때 부패청산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간 횡단분석에서는 부패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및 주관적 차원이 함께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 시민사회, 개인주의 효과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기본모델에서 경제성장과 시민사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함께 부패의 주관적 차원을 고려할 경우 개인주의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에서 분석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기존 연구에서 부패형성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소득분배, 정부책임, 행복수준, 제도신뢰 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맥락분석에서는 한국사회의 부패수준이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단계에 와있으며, 지배층의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부패가 공공서비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데 비해, 반부패 노력에서는 정부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신뢰도는 보수 정부보다는 진보 정부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청렴도의 수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국가 간 편차를 비교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제시된 경제성장, 시민사회, 개인주의 요소가 국제지형의 보편성을 반영한다면 사례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지배층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만성적인 부패문제에 놓여 있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함의한다. 두 가지 차원에서 공통점은 정부책임이나 제도적인 틀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반부패 노력이 사회투명성에 관한 규범과 도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패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성장이라는 핵심요소 이외에도 시민사회가 중요한 변수가 되며, 개인주의 가치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본연적 가치를 배제하거나 등한시해 온 기존의 발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이론적 가정과 정책적 판단은 사회 구성원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사회갈등과 대립을 가중시켜 사회발전의 외연에만 치중한 채 부패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간과할 위험이 많아진다. 따라서 큰 정부와 규제개입이 관료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의 원리에 위임하는 처방이 좀 더 타당하다는 자유주의 시각이나 부패청산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보수주의 시각을 넘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차원에 관한 일관된 효과를 고려할 때, 어느 한쪽 시각의 지나친 강조는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패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스템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잘못된 시스템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위결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도덕적 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뇌물예 대한 손익계산은 당사자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이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직한 관행과 의식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손익 계산에 밝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패의 과실을 얻으려고 하며 동조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긴 줄에서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정직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을 바보라고 경멸한다면 정직한 것이 손해가 되는 주객전도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하물며 사회가 개인보다 더 도덕적일 수 없다는 명제 앞에서 구성원의 신뢰를 영영 잃어버린다면 누가 진정한 바보인가?

부패현실과 부패인지의 차이는 물질적 조건 이상의 가치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 있고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이 적은 국가일수록 부패인지의 수준이 높다는 결론은 정책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회의 부패인지가 높으면 국가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패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패해결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호간의 역할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이 사회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다. 부패문제의 해

결을 추구하는 과정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그 틀이 다시 개인의 일상을 지지해 주는 선순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패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부패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부패를 완벽하게 줄이기에는 지불할 비용이 너무 많다. 더욱이 부패방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엄격하고 억압적인 정부나 기관을 양산할 뿐이다. 목표는 완벽한 청렴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공정성, 정당성, 효율성과 함께 정직함의 근원적인 증가에 있다고 하겠다. 발전연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질적인 접근을 향후 과제로 남기고 있다.

투고일: 2017년 12월 15일 | 심사일: 2018년 1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5일

## 참고문헌

- 고길건·이보라. 2012. “사회의 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권 3호, 405-427.
-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패인식도조사 종합결과』.
- 김준석·조진만·엄기홍. 2011. “부패인식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의 차이는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권 4호, 343-371.
- 김현. 2015.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관료통제에 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4권 2호, 257-282.
- 박선웅. 1998. “부패용인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문화적 접근.” 『사회발전연구』 4집, 89-108.
- 서문기. 2015. “잘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한국사회학』 49권 1호, 111-137.
- 송창근·박홍식. 1994. “부패의미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의미규정.” 『한국행정정보』 28권 3호, 721-733.

- 신동준. 2013. “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형사정책연구』 24권 4호, 149-191.
- 윤은기·이정주. 2014.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 부패학회보』 19권 1호, 143-167.
- 윤태범. 1998.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권 1호, 213-231.
- 이상환. 2008. “아시아 국가들의 반부패 현황과 전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권 2호, 415-438.
- 장근호. 2000.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경제사회적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15권 1호, 31-56.
- 장은주. 2016. “대한민국은 어떻게 부패공화국이 되었나?” 『철학과 현실』 111집, 169-182.
-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 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허일태. 2015. “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형사정책연구』 26권 3호, 157-185.
- Acemoglu, Daron and James Robinson. 2013.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Y: Crown.
- Alesina, Alberto and George Angeletos. 2005. “Corruption, Inequality and Fairnes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 1227-1244.
- Anderson, Christopher and Tverdova Yuliya. 2003. “Corruption, Political Allegiances,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1), 91-109.
- Andersson, Staffan and Paul Heywood. 2009. “The Politics of Perception: Use and Abuse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s Approach to Measuring Corruption.” *Political Studies* 57, 746-767.
- Arvin, Mak and Byron Lew. 2016. “Does Income Matter in the Happiness-Corruption Relationship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41(3), 469-490.
- Bai, Jie, Seema Jayachandran, Edmund Malesky, and Benjamin Olken. 2013. “Does Economic Growth Reduce Corrup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Vietnam.” *NBER Working Paper* 17398.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atabyal, Sourav and Abdur Chowdhury. 2015. “Curbing Corruption, Financial Development and Income Inequality.”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 15(1), 49-72.
- Bohn, Simone. 2012. "Corruption in Latin America: Understanding the Perception–Exposure Gap."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4(3), 67-95.
- Bok, Derek. 2011. *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iden, Gerald. 2001. "Corruption and Governance." In Gerald Caiden, O. Dwivedi, Joseph Jabbara, eds. *Where Corruption Lives*. Bloomfield: Kumarian Press.
- Elbahnasawy, Nasr and Charles Revier. 2012. "The Determinants of Corruption: Cross-Country-Panel-Data Analysis." *The Developing Economies* 50(4), 311-333.
- Fijnaut, Cyrille and Leo Huberts, eds. 2002. *Corruption, Integrity and Law Enforcement*. Den Haag: Kluwer Law International.
- Forbis, Jeremy. 2013. "Organized Civil Society: A Cross-national Evalu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Density on Governmental Corruption." *Sociological Focus* 46, 159-177.
- Fried, Brian, Paul Lagunes, and Atheendar Venkataramani. 2010. "Corruption and Inequality at the Crossroad: A Multimethod Study of Bribery and Discrimination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45(1), 76-97.
- Ghaniy, Nafi and Fithra Hastiadi. 2017.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ial Issues* 7(4), 144-149.
- Hakhverdian, Armen and Quinton Mayne. 2012. "Institutional Trust, Education, and Corruption: A Micro-Macro Interactive Approach." *Journal of Politics* 74(3), 739-750.
- Harrison, Lawrence and Samuel Huntington. 2000.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Y: Basic Books.
- Hofstede, Geert. 2003.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CA: Sage.
- Husted, Bryan. 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 1-24.
- Kaufmann, Daniel and Aart Kraay. 2004. "Governance Matters III: New Indicators for

- 1996-2002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ed. *Global Corruption Report 2004*. London: Pluto Press.
- Kenny, Charles. 2009. “Measuring Corruption in Infrastructure: Evidence from Transi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5(3), 314-332.
- Kerbo, Harold. 2009.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NY: McGraw-Hill.
- Krueger, Anne. 1990. “Government Failure in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3), 9-23.
- Lederman, Daniel, Norman Loayza, and Rodrigo Soares. 2005.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Political Institutions Matter.” *Economics & Politics* 17(1), 1-35.
- Li, Hui, Ting Gong, and Hanyu Xiao. 2016. “The Perception of Anti-corruption Efficacy in China: An Empirical Analysis.” *Social Indicator Research* 125, 885-893.
- Mauro, Paolo. 1998. “Corruption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 263-279.
- Melgar, Natalia, Rossi Máximo, and Tom Smith. 2010. “Research Note: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 120-131.
- Mishler, William and Richard Rose. 2008. “Seeing Is Not Always Believing: Measuring Corruptio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Paper Prepared for the The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008 Annual Conference. Manchester: University of Manchester.
- Mo, Pak Hong. 2001.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9, 66-79.
- Mocan, Naci. 2009.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and Economic Growth.” In Serdar Sayan, e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stitutions, Corruption and Reform*. London: Routledge.
- Montinola, Gabriella and Robert Jackman. 2002. “Source of Corruption: A Cross-country Stud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147-170.
- Olken, Benjamin and Rohini Pande. 2012.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nual Review of Economics* 4, 479-505.
- Pawar, Manohar and David Cox, eds. 2013. *Social Development: Critical Themes*

- and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Peyton, Kyle and Ariel Belasen. 2012. "Corruption in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Evidence from a Pooled Cross-Section."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48(2), 29-43.
- Rothstein, Bo and Jan Teorell. 2005.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Institutions."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ashington D. C.
- Samadi, Ali and Bahare Farahmandpour. 2013.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Corruption in Selected Countries (1995-2007)." *Journal of Emerging Issues in Economics, Finance and Banking* 1(3), 214-231.
- Schatz, Florian. 2013. "Fighting Corruption with Social Accountab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Accountability Mechanisms' Potential to Reduce Corrup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33, 161-174.
- Seligson, Mitchell. 2006. "The Measurement and Impact of Corruption Victimization: Surve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34, 381-404.
- Shleifer, Andrei and Robert Vishny.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3), 599-617.
- Suh, Moon-Gi. 1998.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NY: Praeger.
- The Economist. 2016. "Standing by Their Man: The State of Global Corruption." London: The Economist Group.
- Themudo, Nuno. 2013. "Reassessing the Impact of Civil Society: Nonprofit Sector, Press Freedom, and Corruption." *Governance* 26, 63-89.
- TI. 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reisman, Daniel. 2007.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Causes of Corruption from Ten Years of Cross-National Empir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211-244.
- Uslaner, Eric. 2008. *Corruption, Inequality, and the Rule of Law: The Bulging Pocket Makes the Easy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Eric and David De Cremer. 2006. "Self-benefiting in th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Leader-follower Effec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Value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352-1361.

World Bank. 2017. *World Development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Values Survey. 2017. *Online Data Analysis*.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Abstract

## Determinants of Corruption Percep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Asian Experiences

Moon-Gi Suh Soongsil University

As the theoretical issues of corruption come from the perspective of rent-seeking and since there is no simple relationship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in corruption, there is difficulty in designing a research plan. Given the very limited empirical research on this topic,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corruption perceptions, utilizing a new approach on the framework of corruption. Combining both the macro and micro dimen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analysis involves the testing of common parameters of the mechanism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economic growth, civil society, individualism function similarly when measured using an objective and a subjective yardstick. Primary findings in a case study show that the public does not hav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efforts, and corruption exacerbates the perceived unfairness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dominant class. It suggests that a matching device for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s a focal point for development, reduces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This makes it a more comprehensive scheme beyond both liberalism and conservatism, and addresses not just a particular aspect. Further advances in the study of corruption require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structural embeddedness of corruption in society.

**Keywords** | Systematic corruption, rent-seeking, civil society, anti-corruption, Asia

